

초중고 자퇴생 매년 4만명 발생...여가부 폐지맨 어찌나

2021학년도 4만2755명 자퇴...33.5% 급증
교육부 학력취득 지원사업 실적 1% 그쳐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부실해질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거두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평균 4만2000여명의 초·중·고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 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 4만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등 비율로 학교를 떠난 학생이 늘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중단을

이 상승세였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온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관리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해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에게 상담, 학력취득, 취업지원 등을 돕고 있으며, 전국 220개(올해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응과 학업 복귀를 돕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학업복귀율은 지난 2018년 23.1%에서 올해 33.2%로 증가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학습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다. 검정고시가 아닌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교육부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정작 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습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를 통해 졸업학력을 취득한 학교밖 청소년은 극소수였다.

사업 시작 후 누적 등록학습자는 242명(2018년), 653명(2019년), 978명(2020년), 1399명(2021년), 1689명(2022년)으로 늘었다. 반면 이 중 학력인정자는 같은 기간 14명(6%), 19명(3%), 26명(3%), 26명(2%), 18명(1%)에 그쳤다.

학습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2020년 20억원에서 2022년 11억460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학교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지만, 교육

<초·중·고 각급 학교별 학업중단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20학년도	11,612	5,976	14,439	32,027
2021학년도	15,389	7,235	20,131	42,755

(단위: 명)

(출처: 교육부)

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학교 밖에서 계속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여가부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공무는 직제나 시행규칙과 같은 법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 없이 교육부가 그런 논의들을 해 나가기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학교밖 청소년이라도 의무교육 단계에 있다면 두 부처가 협

업해 돌아야 한다"며 "여가부와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연계해 아이들이 돌보는 데 사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습지원 시범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특정해 말할 수 없다"며 "등록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도 있고 시도별·지역별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선욱기자



파란 하늘에 그려지는 태극 문양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K-밀리터리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사전 훈련을 하고 있다.

오모씨 기자회견 취소 "50대 여배우 불륜설 명예실추, 어떠한 처벌 받겠다"

"사업 욕심에서 비롯...사회적 물의 죄송"

50대 여배우 A를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오모씨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욕심으로 인해 A 명예를 실추했다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사과했다.

오씨는 21일 오후 3시 용산구 서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그간 보도된 모든 정황은 나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 있던 지인 소개로 A를 모 골프장에서 만났다. 50대 나이에 볼 수 없는 완벽한, 만능 엔터테이너를 직감했다. A를 섭외해 내가 생각하고 설립·추진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영입 제안을 했다. 나 스스로 몰심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했고 좋아하던 팬이었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찾아왔다. 경제적 압박이 날이 커졌다. A는 '신생 회사와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능을 통보했다.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마련하던 중 A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모든 상황에 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오씨는 "한 여배우가 일생을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 A와 그의 가족, 지인, 팬들, 기자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나의 경솔함과 무책임 모두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오씨는 불륜관계였던 A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A로부터 흥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A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했다. 오씨에 따르면 A 아이 교육비, 골프 비용 등을 부담하고 차도 사줬다.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지난해 4월 이혼했으나, A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뤘고 7월 중순에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했다. 오씨는 2년간 쓴 돈이 약 4억원이지만, A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받겠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